동북아에서의 화합, 평화와 번영: 역사적 경험의 탐색

피델 라모스
(Fidel Valdez RAMOS)

서론

북한의 핵 야욕에 대한 논란이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마침내 6자 회담이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동북아의 핵무장에 대해 중국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덕분입니다. 6자 회담의 보호 아래 평양과 워싱턴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갈망하던 양자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북한은 이것을 김정일 위원장이 국제적 지도자로 부상했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일시적으로나마 개선된 듯 하나 여전히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있습니다.

자체 노선을 걷기 시작한 한국

한편, 자신감이 급상승한 한국은 (한국의 GDP는 이미 ASEAN 총 GDP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그동안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전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한 것은 아닙니다. 2005년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우라늄 농축 실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소수의 과학자들이 "정부와 상관 없이 과학적 목적으로" 실행한 1회성 실험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한국은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수주의자들이 동중국해와 동해의 잠재 탄화수소 퇴적물 문제에 관해 중국인들과 손잡고 일본에 대한 역사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의 강화와 함께 미국은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개선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해지고 있는 한미 관계와 대조를 이룹니다. 개인적인 전쟁 경험이 없이 한국전쟁에 그저 막연한 관심을 갖고 있는 차세대 한국인들은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노리는 서울의 노력을 방해하는 워싱턴에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즉각적 관심사

일본의 즉각적 관심사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국방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주변국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물론 일본도 핵기술과 고체연료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자급력이 아닌 미국과의 강한 유대가 오늘날 일본의 핵심 방어전략입니다. 후쿠오카에서 4월에 개최된 동아시아 원로 지도자 포럼(EASLF)에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일본의 안보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6자 회담이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남아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북한은 벼랑 끝 외교정책을 버리고 중국과 한국의 개발과정으로부터 교훈을 배워 자족력을 높일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럴 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질서가 정착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의 안정은 동아시아의 안보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세 나라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내 모든 나라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했습니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ASEAN 국가 내 안보 협력 및 ASEAN 국가와 미국의 안보 협력은 동아시아 안보 확립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ASEAN 지역포럼 기능의 강화와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신뢰 구축을 통해 보다 폭넓은 안보 네트워크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U의 교훈: 공동의 목표

긴장상태가 다소나마 완화된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장기적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되기에 충분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의 서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세 차례의 전쟁을 치른 유럽의 강대국 프랑스와 독일에 현재 어떠한 분쟁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서유럽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장기 해결책은 주변국과 강력한 경제, 정치, 안보관계를 유지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새로운 무기 체제의 파괴력이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인류가 계속 생존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공동체가 바로 '미래의 물결'이 돼야 합니다.

프랑스의 모네(Monnet)와 슈망(Schuman), 서독의 아데나워(Adenauer), 이탈리아의 데가스페리(de Gasperi) 등 서유럽의 2차 대전 후세대 정치가들은 국가 주권의 폐기를 무조건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럽의 경제 정치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그들의 기본 원칙은 로베르 슈망(1947-48에 총리 역임)에 의해 역설됐습니다.

> *"유럽은 하루 아침에 지어지거나 전체 디자인의 일부로서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공동의 목표감을 심어주는 실용적인 성과를 통해 구축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의 설립은 소박하게, 그리고 사실상 눈에 거의 띄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먼저 프랑스와 독일의 전시 생산 관련 산업들, 즉 석탄이나 철강 산업의 통합이 진행됐고 이후에 경제 통합이 가속됐습니다. 관세 동맹을 통해 공통외부관세가 도입됐고 공통 경제정책이 시작됐습니다. 경제 통합이 본 궤도에 오른 후에야 정치 통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동 의회와 고등법원을 통해서, 그 후에는 집행이사회(Executive Commission)와 EU이사회(Council of Ministers)를 통해 통합이 진행됐습니다. (방위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성급한 노력은 1954년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회원국도 서서히 증가했고 동유럽과 지중해 국가들도 참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공통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서 유럽의 통합 모델은 타 지역공동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질서한 무력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기아와 질병, 억압, 테러리즘, 절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원한다면 개별 국가들은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정책을 주변국과 국제 개발에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 운동이 연맹이나 공동체, 결과적으로는 연합으로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서유럽과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로부터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는 EU의 지속적인 확장, 단일 통화 도입, NATO와는 별개의 유럽군 창설을 위한 '공동 안보 외교 정책'을 채택하려는 노력 등 유럽 연합의 발전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냉혹한 앵글로색슨 경쟁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은 평등과 정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동정과 같은 사회적 필요와 국제 시장의 기능을 중재하는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럽 헌법 초안 거부는 국가적 다양성과 초국가적 연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과 같은 연합은 때때로 제기될 수 있는 회원국의 거부를 잘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고 믿습니다.

동아시아 통합과 시장 체제

동아시아의 통합은 주로 시장 체제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정치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장경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동남아 10개국이 ASEAN이라는 이름 하에 모여있으며 ASEAN 헌장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ASEAN 회원국과 중국, 일본, (통일되고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경제그룹(EAEG)에 대한 구상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원대한 포부의 초기 단계는 ASEAN 10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04년부터 시작돼 2010년까지 완성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ASEAN 10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도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인도도 2005년 이후 ASEAN 10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아픔과 고통에 공동체라는 약을 처방하려면 동북아 지역은 백지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역기구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분석가들은 임시 성격의 6자 회담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동독의 사회적 폭발을 답습하는 일이 없이 은둔 상태로부터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동북아시아는 당분간만이라도 스스로 구축한 위태로운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연합된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화해와 공동체 구성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1952년에 그랬듯이 한국과 북한도 근본적인 차이점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에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차원의 대화도 시작돼야 합니다. 독재정권 하에서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은 결속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또한 38선 주변의 무역과 투자, 관광, 기술 이전을 활성화시키고. 경제가 정치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공동체 구축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 동북아에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야 합니다 한편, 더 넓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의 기반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포럼(APEC)과 함께 이미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경제 통합 뒤에는 반드시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확립돼야 합니다.

향후 10-15년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태 지역의 안정을 확립했던 미국식 평화(팍스 아메리카나)를 '팍스 아시아 퍼시피카(Pax Asia-Pacifica)'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식 평화와는 달리 아시아 태평양식 평화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평화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군사력으로 보장되는 평화와 안보)로부터 팍스 아시아 퍼시피카로의 전환은 역내 주요 국가들과 하위 지역 블록(bloc)이 아시아 태평양 안보와 안정에 기여 및 공유할 수 있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맞서야 할 공통의 지정학적 위협은 국제 테러와 핵무기 확산, 장기간의 아랍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한 불안, 이라크 전쟁 장기화, 현 UN 시스템의 구조적 균열 등입니다.

역내 이웃이자 파트너로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ASEAN, 캐나다, 통일되고 핵 위험이 없는 한국,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평화롭고 안정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공유하는 관심사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유럽인들은 미국과 소련의 교착 상태를 이용해 유럽연합을 강화 및 확대시켰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발칸 반도, 한반도, 아이티 등 다양한 분쟁지역에 무리하게 배치된 미군 병력, 테러를 방지하는 강력한 국가 안보 시스템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후의 효율적 공공안전 메커니즘에 대한 미국인들의 강력한 요구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의 전면적 개편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국방 지출 감소를 통한 납세 부담 절감은 이러한 상황의 중요한 부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간의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일에 있어서 미국이나 UN에 단독으로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태지역의 평화는 '힘의 균형'이 아닌 '공동 혜택의 균형'에 기초한 안보협력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태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해 힘을 모아 부담을 공유해야 하며 미국, 일본, 중국, 한국과 같은 아태지역 내 강국들 간의 협력적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전체 아태지역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